

1. 인문계열(1교시)

제시문 및 문제

가

국가는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지 제도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복지 제도에 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이 저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확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국가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복지와 증세 관련하여 두 개의 정책안을 비교해 봄으로써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상 한 가상국가의 정부가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조세 징수를 통해 얻는 재정이 같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복지와 증세에 대한 정책으로 A안과 B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으로 1인당 연간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A안: 무소득자에게는 1년에 1,000만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만큼 복지 혜택을 축소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0만원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B안: 복지 혜택으로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모든 연 소득에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서 연 소득은 조세 납부와 복지 혜택 수령 전의 소득이고, 순 혜택은 복지 혜택에서 조세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A안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안으로, 그 재원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소위 '선별 복지와 선별 과세'의 조합이다. 반면 B안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며, 그 재원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보편 과세로 조달된다. K씨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이다. K씨의 경우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일까?

나

가상국가 '좋은 나라'정부가 제안한 노인연금 50만원 인상 정책이 고령층 사이에서 분란이 되고 있다. 노인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과 예산 등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연금 예산은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추가 소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자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 중 노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30%에서는 "왜 70%만 주느냐,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노인연금은 '좋은 나라'정부의 또 다른 노후 대책 연금 제도인 평생연금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평생연금은 젊어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기본 생활 수단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 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및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평생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면, 평생연금 평균 금액인 60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평생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중 노인연금 대상이 아닌 이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보험료 내고 평생연금 받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평생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연금도 받는 고령층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노인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나라에서는 평생연금 수령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노인연금액이 줄어드는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이 제도에 대해 평생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나 노인연금의 역할과 자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논어』 「계씨」에서 공자는 제자 염유(冉有)에게 말했다. “나라와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고르게 하면 가난함이 없고 조화를 이루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정치에서 균형(均平)과 균분(均分)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약용은 정치의 근원을 따져 묻는 『원정(原政)』에서 치우친 봉당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넓혀 현명하고 능력있는 자를 우대하는 정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이 말한 공도는 정치의 공정한 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제시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은 『경세유표(經世遺表)』라는 유명한 책에 잘 나타난다. 정약용은 토지 제도를 말할 때 균전(均田), 균산(均産)의 의미를 비판했다. 농사짓는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게 해야지 국가가 일일이 민의 살림을 똑같이 챙길 수 없다는 말이다. “먼저 백성의 살림을 엿보고 부유한 자의 것을 덜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태고자 하니 이것은 이롭지 않은 헛된 일이다.” 백성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능력에 따라 자립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국가가 일률적으로 균전·균산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신분제 사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분수에 맞는 것이란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아마도 각자의 분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유학자들이 생각한 공정의 의미였을 것이다.

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국민들 중 본인의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¹⁾(한화 대략 1억 6천 3백만원, 부부 합산 25만달러)보다 적은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탕감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 2만달러로 늘어난다. 백악관은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학자금 대출 문제는 미국 내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은 약 3만 7000달러(약 5,180만원)에 달한다.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이미 몇 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도 상원의원이

1 환율을 \$1=1,300원으로 계산함.

된 2004년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였다. 현재 미국의 연 평균 사립대 등록금은 3만 8,185달러, 공립대는 2만 2,698달러 수준이다.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현재 학자금 대출자 5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갚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해주겠다고 하니 학자금 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밖에 없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대학 교육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인데 반해 이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출금을 성실하게 모두 상환한 사람들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불공정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벤 새스 상원의원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탕감 계획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대학생을 위한 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 역시 “배관공과 목수에게 월스트리트 고문과 변호사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것인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K씨 사례를 A안과 B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라]의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900±100자)